

‘한 지붕 두 가족’ 평화당 당권파 vs 대안정치 공방

당권파, 박지원 공격·유성엽 정계 청원 등 조치 잇따라
대안정치, 당내 여론 확장·외부인사 영입 활동 매진



자강(自強)파와 제3지대파로 나뉘어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 구도로 활동 중인 민주평화당이 당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이 한창이다.

평화당은 지난 16일 오후 9시부터 시작된 심야 의원총회에서 향후 당의 진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강파와 유성엽 원내대표와 박지원·전정배 의원 등으로 구성된 제3지대파가 갈등을 털어내고 단일 대오를 구성할지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을지 관심이 모아졌다.

결국 제3지대파는 ‘변화와 희망을 위한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를 결성했다. 함께하는 의원은 김중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전정배·최경환 의원 등 10명이다. 이중 유성엽 원내대표가 대안정치의 대표를 맡고 최경환 의원이 대표간사, 장정숙 의원이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이후 양측의 신경전에 속도가 붙었다. 정동영 대표는 심야의총 다음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안정치 측 박지원 의원을 겨냥해 ‘뒤에서 분열을 선동한다’고 말했다고, 몇 시간 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정치는 평화당을 제3지대로 전환하기 위해 결성된 것이며 제3지대로 가는 데 현재 당 대표가 걸림돌’이라고 반격했다.

지난 18일에는 정동영 대표가 당내에 특별기구 ‘대변화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대안정치가 내놓은 제3지대 구축을 탈당이나 신당 창당이 아닌 자강을 중심으로, 평화당 내에서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다.

반면 대안정치 측은 정동영 체제 1년 동안 오차범위 미만의 정당지지를 이어져왔고, 이래로 내년 총선

에서 승산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즉 대변화추진위를 운영하더라도 대표가 불어나야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당권파는 대안정치 측이 정동영 대표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새로운 인재를 영입한 인사에게 공천권을 일부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 당권과 공천권을 노린 술수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 라인으로 추정되는 평당원 한 명은 대안정치의 대표를 맡은 유성엽 원내대표가 해당(害黨) 행위를 하고 있다며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원하기도 했다.

이에 대안정치는 논평을 내어 “당 지도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대안정치는 평화당의 당권이든 공천권이든 관심이 없다. 좋은 인력 영입을 위해서는 비례 1, 2번도 줄 수 있다는 의지표명을 했을 뿐이다. 방침은 현역의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모색하는 노력을 흑색 선동으로 몰락하는 당 지도부가 분열의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대안정치 측은 당내 여론을 보다 더 집중하기 위한 의원별 불밀 접촉과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해 골몰하는 모양새다. 10명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벌이면서 이따금씩 국회 인근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을 하며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9월 이전 1단계, 연말에 2단계, 총선 직전 3단계로 나누어 신당 창당에 대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라고 밝히기엔 이 시점에 맞지 않지만 3~4명 정도 불씩 해 봤다”며 이른바 뉴페이스 영입 작업이 한창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대안정치 측이 국민의

당에서 한숨을 먹었던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 및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과 손잡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손금주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 ‘올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을 10%까지 올려놓겠다’고 언급했다가 최근 번복했다.

당시 여론조사결과 당 지지율은 4.9%(YTN 의뢰) 리얼미터가 4월8일~12일 2519명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였고, 지난 18일 여론조사에서는 5.2%(tbs 의뢰) 리얼미터가 8월 13일~14일 1005명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를 기록했다.

여기에 혁신위도 주대한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당내 퇴진 목소리가 거세지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정치와 손잡을 경우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안정치 측에 따르면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제3지대 신당이 창당할 경우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당권파 측은 이러한 대안정치 측의 시도가 어불성실이라는 입장이다.

한 당권파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에 “우선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과 다시 합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다. ‘도토 국민의당’ 지적이 나오는 것이 그 이유”라며 “또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복귀설도 나오는데, 안 전 대표가 복귀하면 손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설령 대안정치와 함께 움직인다고 해도 파급력이 크지 않을 텐데 강행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의 내용이 보다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평화당이 곧 제3지대가 될 수 있다. 왜 굳이 명분 없는 신당을 창당하고 말쑥한 정당을 쫓아내려는 것인가”라며 “이는 전당대회라는 정당할 절차를 거친, 당원들의 지지로 선출돼 운영 중인(정동영) 당대표 체제에 뒤늦게 반발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당권파 측에서는 제3지대 구축을 위해 대안정치 결성에 이통을 올린 의원들을 회유하는 작업과 함께 당권을 이용해 대안정치 구성을 주도한 의원들에 대한 공세를 더욱 본격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서로 네 탓”...빈손 임시 국회에 민주·한국 공방

6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문닫게 되자 여야 모두가 책임 공방에 나섰다.

한국당은 20일 “임시국회가 무산된 원인은 분명하다. 무책임한 집권여당의 고집 때문”이라며 “민주당에게 민생 경제 회생을 택하느냐 자기사람을 택하느냐 하는 양자택일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나라 경제상황이 엄중한 때 임시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빈손으로 문을 닫았다”며 “가장 큰 책임은 그토록 주장하던 추경마저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지켜주려는 민주당에 있다”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은 못할 망정 뒤늦게나마 마중물을 대려는 정치권의 노력에 여당은 자기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었다”며 “여당은 복지부동하며 각종 민생 법안과 추경안 처리의 때를 놓쳐놓고 있다”고 힐난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렵게 성사된 6월 임시국회를 이토록 허무하게 마감한 것에 민주당에 유감을 표하며 1차적인 책임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봉기를 뿜고 다음주 중원포인트 임시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쟁을 즉각 멈추고 시급한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한국당에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6월 임시국회가 추경안은 물론 민생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며 “추경을 불모로 무책입한 정쟁만 일삼는 한국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추경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며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등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한국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한국당은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등을 협상의 조건으로 내놓으며 봉기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 바깥을 건 봉기는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가 재난·재해로 고단한 주민과 산업 고용위기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눈물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김현중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청해 강제징용 관련 일본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무례한건日”·“졸지 말자” 대일 여론전 강화하는 청와대

김현중, 브리핑·트위터서
연일 日 고노 주장 반박
“日 무례가 도 넘고 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 적극적인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현중 국가안보실 2차장은 대일(對日) 여론전의 ‘콘텐츠 타워’ 역할을 맡아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김 차장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이 경제 조치를 위한 배경에 대해 처음엔 역사 문제를 거론했다가 우리 수출관리 체제를 문제 삼더니, 여제 고노는 대법원 판례를, 경제산업성 간부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의 속내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본의 무례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청해 거칠게 항의하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고노 외상은 남 대사를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이(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고노 외상은 또 남 대사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던 중 말을 끊고 “한국 측의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측의 (1+1) 제안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에 김 차장은 같은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일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차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나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 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역설했다.

김 차장이 공식 브리핑에 이어 SNS를 통해 ‘무례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일본에 맞대응한 것은 향후 대일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직후에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강경한 메시지를 자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책임한 주장들만 잇따라 내놓고 있어 적극적인 여론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공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이같은 판단의 배경이 됐다.

김 차장은 콘텐츠 타워 역할을 맡아 앞으로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내외신을 상대로 직접 브리핑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